

#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 “경찰국 신속 폐지… 최악 참사, 세월호·이태원”

오늘 인사 청문회 앞두고 요구 자료 국회 제출  
“경찰국 폐지해 경찰 독립성·정치적 중립 회복”  
“세월호, 많은 국민 정부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  
“지방소멸 등 대응, 지자체에 권한 과감히 이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경찰국 폐지 입장”에 대해 “경찰국은 충분한 소통 없이 설치돼 국민 공감 확보가 부족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도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달 30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 공약”이라고 추진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자료 답변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국을 존치하면 설치 시부터 제기된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지속된다”며 “경찰 혁신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분리할 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현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경찰국 폐지 이후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최악의 재난 및 안전 사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꼽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순간을 방종으로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과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했다”며 “(이태원 참사도)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줬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2023년 8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 피해,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등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재난 사례로 꼽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재난 및 안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분석과 재난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재난 주관 부처로서 국민의 생

명과 재산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 “민생 경제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관련 과제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보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중 지역소멸 극복과 관련해서는 “국가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해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윤리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스스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1

## 강선우·이진숙 여론 악화에 고민 깊은 대통령실…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

친여 성향 전교조 이어 참여연대도 “임명 안 돼”

친명 김영진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 있어”

대통령실 “청문회 지켜보고 판단… 기류 변화 없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안팎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후반까지 여론을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강선우 후보에 대

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관련 물음에 “장관 인사 관련해 인사청

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며 “다수의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기류에 변화가 있다는 해석 기사가 나왔지만 기류 변화가 없다고 지금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양한 보고도 받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단 청문회가 끝나는 주말까지는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유튜브에 출연해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 대통령의) 지시는 없

었다. 보고만 받고 있다”며 “일단 청문회가 끝나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갑질 의혹에 더해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진 강 후보자와 제2 논란 가로채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시민사회와 여론 내부의 부정적 여론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와 전교조에 이어 참여연대도 전날 두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이 결여된 인물이라

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좌관 갑질 논란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2 논란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 윤리 문제가 드러났고,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것도 치명적”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원조 친명(친이 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강 후보자의 거짓 해

명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또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명계 의원은 “갑질도 문제지만 강 후보자의 해명이 보도 이후 뒤집힌 것이 여론 악화에 결정타였다”며 “임명을 강행하면 국정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장관직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1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유진건설산업(주)** **철근콘크리트공사**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502  
(062)-655-1370  
대표이사 정길화